



- 제17·18·19대 국회의원
-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위원장
- 아시아평화원연대회의 운영위원회 위원장
- 국회 한·미자유무역협정(FTA)체결대책 특별위원회

제19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강창일 위원장 인터뷰...

취재 | 정책개발팀 손영선

Q. 19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역할과 계획

A. 지식경제위원회의 역할은 막중하다. 중소기업 육성을 비롯해 수출과 무역, 에너지, 자원 등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를 다루고 있고, 친 서민 정책과 대한민국 산업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지경위는 타 상임위원회에 비해 여야간 국내 산업·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으며, 위원 상호간 존중과 배려를 통한 활발한 토론과 생산적인 활동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던 우등상임위였다. 이러한 지경위의 전통을 한 차원 더 높게 계승·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국내·외 모두 어려운 시기인 만큼 한국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내 경제 활성화 도모 및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주요 현안을 중점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위원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을 기반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소명에 맞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Q. 국회 신재생에너지 정책연구포럼은

A. 국회 신재생에너지 정책연구포럼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저감을 통한 온난화에 능동적 대응과 신성장 동력의 한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재생 에너지 정책 활성화 방안을 제시 및 실천을 목적으로 설립했다. 포럼의 회원구성에는 박지원 원내대표와 이종걸 의원 등 중진급 의원과 홍익락, 신동우 의원 등 초선의원이 포함된 11명의 정회원, 김성근, 신계륜, 이낙연 의원 등을 비롯한 24명의 준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 지난 7월 2일 '정전대란, 스마트그리드가 해법이다'를 주제로 국회 신재생에너지 정책연구 포럼 창립

기법 간담회를 개최해 향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국회포럼에 대한 기본 운영목표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로서 신재생에너지 정책 홍보기여와 신재생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입법가능 강화, 정책·제도 개선 노력, 국제 연대 활동 및 전국적 행사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전문위원의 참여도 제고와 정보서비스 추진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는 것이다.

앞으로 국회포럼을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의 한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과 해법을 모색하는 연구단체로 자리 잡을 것이다.

Q. 전기인의 역할

A. 전력은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아주 중요한 분야로서 전기인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국민경제성장과 함께 전력설비의 대형화, 지능화됨에 따라 전력기술도 단순히 전등을 밝히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전기인 여러분들도 전력공급의 안정적 및 전력산업의 효율화도모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는데 머리를 한곳에 맞대고 노력해야 한다.

Q. 전력산업의 발전 방향

A. 세계적으로 전력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에도 대응해야 하고, 온실가스도 감축해야 한다. 그만큼 수요자원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IT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전력산업과 스마트그리드 세상을 만들고 있다. 이처럼 전력산업의 환경 및 패러다임은 급변하고 있다.

전력산업은 현대 생활의 필수 서비스인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전력 산업은 한번 해봐서 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인 벤처 사업이 아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그 어떤 산업보다 더 신중한 논의와 검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민주적 참여가 필요한 중요한 산업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전력산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과거보다 더 심도 깊고 진정성 있으며, 무엇보다도 민주적인 논의절차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전력인을

포함해 모두가 나서서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Q. 일본과 연관된 역사 중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하는 것

A. 우리나라는 20세기 전반기 36년 동안 일제에 의해 불법강점을 당했다. 한민족 근대사의 과정에 끼어든 이 식민지 시기는 역사적으로 볼 때 한민족이 근대시민사회의 민족국가를 형성해야 할 귀중한 시기였다.

그런데 일제의 식민지화에 의해 자생적·자발적인 반봉건·근대화 운동은 좌절당했다. 뿐만 아니라 식민지 경험과 그 유산으로 인해 해방 이후에도 한민족은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각각 권위주의 체제와 통제된 사회 속에서 많은 갈등과 모순을 노정해야만 했다.

일제의 조선지배원리는 민족말살주의이고 영토확장주의였다. 이것을 한마디로 민족말살을 통한 영토확장주의다. 민족말살정책은 더 나아가 한국인을 군인·군속·노무자·군위원부로서 강제 연행해 전쟁 소모품화함으로써 민족말살정책을 취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Q. 100만여 전력기술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A. 최근 전력·발전업계에서 크고 작은 소동이 끊이지 않았다. 작년 9.15정전에서부터 원전 정전 미보고, 발전소 화재 등 관련 업계는 그로기 상태이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당연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동안 전력과 발전업계의 노력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100만여 전력기술인들은 일부 사태에 대한 국민적 편견을 전체의 편견으로 보지 말고 앞으로의 도전을 계속해야 한다.

세계최고 등극을 위한 기술개발 성과와 전력산업의 미래를 꿈꾸길 바란다.

국회차원에서도 전력산업의 힘찬 재도약의 기회를 다시 한번 만들어 나가도록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